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46
----------	------

발의연월일 : 2024. 8. 27.

발 의 자 : 이수진 · 김정호 · 신정훈

송옥주 · 서영교 · 박홍배

민형배 · 정태호 · 추미애

송재봉 의원(10인)

제안이유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2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임금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재직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함(안 제37조제2항 신설).

-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입찰 등에 참여한 사업주의 임금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간접적으로 예방함(안 제43조의3제2항 신설).
- 다.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2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4 신설).
- 라.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체납금액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안 제43조의5 신설).
- 마.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49조).
- 바.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면책범위를 축소함(안 제109조제2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은”을 “제1항 및 제2항은”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 및 지연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3조의3제1항 본문 중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를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체불사업주에 대하여”로, “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를”을 “자료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를 “자료제공의”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

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또는 제2항에”로, “판단과”를 “판단 또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등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1.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의 제공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
2.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의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등을 체불하여 1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
2.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의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제43조의4 및 제4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4(상습 체불임금등에 대한 지급청구) ① 근로자는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등의 2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2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2.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임금등의 체불 기간·횟수 및 체불된 임금등의 규모

2.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3.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액

4. 사업주의 재산상태

제43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같은 법에 따른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시 근로자 수

2. 보험료의 체납금액 및 체납기간

제49조 중 “3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

제109조제2항 중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를 “채불임금 합계가 평균임금의 5분의1 미만이고, 피해자에게 변제한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로 한다.

제116조제2항제2호 중 “제39조”를 “제37조, 제39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금등 채불자료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고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습 채불임금등의 지급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 ① (생 락) <u><신 설></u>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 ① (현행과 같음) <u>② 사용자는 제43조에 따라 지 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 우 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은행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은행 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 및 지연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은</u> 사용자가 천재 · 사 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 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 지 아니한다.	<u>③ 제1항 및 제2항은</u> ----- ----- ----- ----- ----- -----.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 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신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 공) ① -----

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체
불사업주에 대하여-----

-----자료를-----

-----.

-----자료제공의-----

-----.

1.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
불액 등에 관한 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의
제공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 자료를 받은 자는 이를 체불사업주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2.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기준
일 이전 1년 이내의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기준
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등을 체불하여 1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

2.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기준
일 이전 1년 이내의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판단 또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등과-----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

제43조의4(상습 체불임금등에 대한 지급청구) ① 근로자는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2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2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2.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
을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임금등의 체불 기간·횟수
및 체불된 임금등의 규모
2.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3.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
급액
4. 사업주의 재산상태

제43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고용
노동부장관은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
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
단에 같은 법에 따른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
건강보험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시
근로자 수
2. 보험료의 체납금액 및 체납
기간

제49조(임금의 시효) -----

<p>른 임금채권은 <u>3년간</u>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p> <p>제109조(벌칙) ① (생략)</p> <p>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u>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u></p> <p>제116조(과태료) 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생략)</p> <p>2. 제14조, <u>제39조</u>,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 제7항·제9항, 제76조의3제2항·제4항·제5항·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p> <p>3. 4. (생략)</p> <p>③ (생략)</p>	<p>-----5년간----- -----.</p> <p>제10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채불입금</u> <u>합계가 평균임금의 5분의1</u> <u>미만이고, 피해자에게 변제한</u> <u>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명시적</u> <u>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u> <u>할 수 없다.</u></p> <p>제11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제37조, 제39조</u>----- ----- ----- ----- -----</p> <p>3. 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	---